

집값 사과·투기 이익 환수... 민주당, 민심 달래기 사활

김태년 “3월국회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야당과 협의 시작하겠다” 주택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부동산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한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서울과 부산에서 민심을 얻지 못하고 있는 여당이 뒤늦게 민심 달래기에 주력하지만 강력한 후속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 “3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라도 이해충돌방지

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공직자 투기를 막을 근본 대책을 요구하는 민의가 뜨겁다. 국회는 공직자의 사익 추구에 대해 제대로 입법외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질타도 받고 있다”면서 “3월 중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라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할 것을 야당에 제안했다. 야당도 법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국민의 지적에 대해 응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

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는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과 3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협의의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무주택자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LH 직원들의 투기이익을 소급 환수하기 위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추진 계획 등을 밝혔다. 2·4 공급대책에도 청년층 등 무주택자들의 불만이 누그러지지 않자 대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사과 발언도 등장

했다.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여러 가지로 부동산 문제로 실망과 분노를 안겨드린 것 같아 참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며 “저희가 더 치열하게 반성하고 틀을 제대로 짜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다”고 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따랐다가 손해 봤다고 느끼는 국민들, 상대적 박탈감을 겪게 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35층 일률 규제’ 완화, 재개발·재건축 찬성, 공시지가 인상 속도 조절 등

부동산 정책 기조와 다소 다른 목소리를 연일 내는 것도 민심 수습 차원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당 지지율 결집과 중도층 지지 확보를 위해 민생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와 민주당 시장 간 협력의 중요성을 부각하겠다는 계획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자체 분석 결과 서울 시장 후보 지지율 격차가 10% 인파까지 따라붙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 비해 우리 당 지지층 결집도가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싸우는 시장이 아니라 민생을 해결할 시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혜철 행정안전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민주당 ‘막말 경계령’

검증 없는 발언 역효과 우려... 이낙연 “합리적 문제 제기 원칙”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서울과 부산의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29일 당내 구성원들에게 막말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당 일부에서 야당 후보들에 대한 검증없는 발언을 쏟아내면서 자칫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의혹은 너저티브로 치부하기에는 매우 심각하다”며 “민주당은 철저한 검증으로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야야를 막론하고 국민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과도한 표현은 자제해야 한다. 과도하고 혐오스러운 표현은 오히려 후보 검증의 취지를 흐리고 국민을 불분명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막말로 선거 분위기를 흐트리는 것은 자제하고, 당내 구성원은 품격있는 언어로 남은 기간 선거운동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의혹들이 자고 일어나면 터져 나오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의혹 해소 대신 흑색선전 운운하면서 선거를 혼탁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선거를 혼탁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힘 후보들이 진실에 입각하지 않고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가 주요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김 직무대행은 “이해충돌방지법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이다”며 “국민의힘과 3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협의의 시작하겠다. 법제정을 위한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 역시 “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합리적인 문제제기와 정당한 비판은 정치집단의 의무이다. 그것을 너저티브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너저티브이다”면서도 “앞으로도 저희들은 합리적인 문제제기와 정당한 비판을 주저하지는 않겠다. 다만 표현은 항상 절제되고 품격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정원, 직무감찰 착수

MB정부 불법사찰 진상규명

국가정보원은 29일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직무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2009년 12월 이명박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요청문건에 따른 18대 국회의원 대상 직무범위 외 정보활동 의혹과 관련해 지난주부터 진상규명을 위한 직무 감찰에 착수했다”고 보고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정보위원인 홍기원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감찰 대상에는 MB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요청 문건 및 자료, 이에 따른 국정원 내부 이행 계획과 활동 내용, 청와대 보고한 보고서 일체, 인물 자료 존재 여부 및 특이사항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감찰이 끝나면 국정원법에 따라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겠다”며 “감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조사 과정과 내용에 대해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서울·부산 지지율 40% 돌파

리얼미터 조사, 민주당에 오차범위 밖 우세

4월 광역단체장 보궐선거가 예정된 서울과 부산 권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크게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6일 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2516명을 조사한 결과, 서울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 대비 2.3% 포인트 상승한 41.2%로 집계됐다.

이달 1주차 조사에서 34.2%를 기록하며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추월한 이후 처음으로 40%를 넘은 것이다. 2주차(36.4%), 3주차(38.9%) 조사에서도 꾸준히 상승해왔다. 한편 민주당은 0.6%포인트 하락한 25.6%를 나타냈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0.1%포인트 오른 42.1%, 민주당 지지율은 0.9%포인트 오른 24.4%를 각각 나타냈다.

전국 지지율에서도 국민의힘이 우위를 유지했다.

국민의힘은 3.5%포인트 상승한 39.0%, 더불어민주당이 0.2%포인트 상승한 28.3%로 나타

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해 8월 2주차 조사(36.3%) 이후 최고치다. 그밖에 국민의당 8.3%, 열린민주당 5.8%, 정의당 3.6% 순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 평가)은 전주보다 0.3%포인트 오른 34.4%로 조사됐다.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0.3%포인트 오른 62.5%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공·부정 격차는 28.1%포인트로 전주 기록한 격차를 유지했다.

호남(14.2%포인트 ↑), 30대(6.2%포인트 ↑), 정의당 지지층(15.8%포인트 ↑)에서 지지율이 상승한 반면 대구·경북(6.6%포인트 ↓), 60대(2.6%포인트 ↓), 열린민주당 지지층(5.6%포인트 ↓) 등에서는 지지율이 하락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주철현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 하나된 정책방향 필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시갑) 국회의원은 29일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박람회장 공공개발을 위해 여수지역의 하나 된 정책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수박람회장 컨벤션센터에서 해수부 관계자, 전남도 운병태 정부부지사, 도의원, 여수시 관계자, 여수시의원들과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참여한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공공투자 및 개발 재무적 타당성 용역결과’ 지역보고회에서 주 의원은 이같이 밝혔다.

이번 지역보고회는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인수해 공공투자 및 개발에 대한 ‘재무타당성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중장기 재무 안정성은 양호’라는 용역결과를 지역사회에 공유하고 공감대를 넓

히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 해수부는 박람회 정신을 계승하고, 지역주민 뜻을 최대한 반영하는 박람회장 공공개발을 위해 여수와 전남 지역사회 내 사후활용방안의 단일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의원은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의 큰 그림은 박람회 정신계승과 지역사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해수부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공공개발을 통한 박람회장 사후활용 정책을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의견의 일원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대인동 싼 빵

- ▶ 동구 롯데백화점 근처
- ▶ 대지 515㎡(구. 156평), 중심상업지역
- ▶ 오피스텔 허가 특, 타용도 변경 가능
- ▶ 지하1층, 지상9층, 64호실, 47㎡
- ▶ PF 28억 가능
- ▶ 매매 - 21억원, 일시불 대폭 조정가

중개환영. 010-3605-5000

“금” “매”

-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 20층 중 8층, 사무실 전용
- ▶ 계약 108㎡, 전용면적 67㎡
- ▶ 코너, 전망 좋음, 주차 편리
- ▶ 매매 - 1억1천만원
- ▶ 회사 사정상 급매

문의. 010-6837-4700